



주간통일정세 2011-23(2011.05.30~06.0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리무영 화학공업상 부총리 임명(5/3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리무영(63) 내각 화학공업상이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중앙통신은 "리무영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31일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임명 배경은 따로 밝히지 않음.
 - 리 신임 부총리는 북한의 대표적 화학비료 생산기지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일하다 2002년 10월부터는 지배인이 됐으며 2003년 9월엔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화학공업상으로 일함.
 - 리 신임 부총리의 승진은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생산을 독려하는 등 식량증산에 매달리는 북한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 **北김정일, 자연과학연구소 현지지도(6/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확장공사를 마친 자연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달 29일 중국 방문 성과를 축하하는 군 협주단의 공연 관람 소식 이후 나흘만으로 이번 현지지도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수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어족자원 연구와 양어 및 물고기 가공사업을 함께하는 자연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컴퓨터조종실, 진공포장실 등을 둘러보고 "양어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이어 "앞으로 가공대책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각종 혼제품과 절임 제품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여러 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가공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임.

- **"김정일-장쩌민 양저우 회동 불발된 듯"(6/2,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0~26일 방중 때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복수의 정부 고위소식통은 2일 "김 위원장과 장 전주석이 만났는지



여부를 공식 확인할 길이 없으나 여러 가지 입수된 첩보들과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소식통은 "김 위원장으로서 장 전주석을 만나지 못하는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외 회동에서 북·중 경협문제가 희망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서라고 설득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
- 이어 소식통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중국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면서 "중국이 '선물'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함.
- 양저우는 장 전주석의 고향인 데다 김일성 주석이 장 전 주석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장 전주석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됐었으나 불발
- 또한 장 전 주석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두 사람의 회동 불발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성명과 대답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그만큼 북·중 협의가 순조롭지 못했으며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고 말함.

● 北 숙청·세대교체..김정은 '인적기반' 구축(6/2, 연합뉴스)

- 북한이 주요 간부에 대한 숙청과 세대교체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 중심의 인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소식통은 2일 김정은이 기강확립을 위해 중앙당에 양대 공안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문세 간부 색출과 함께 총복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함.
- 이런 조치의 하나로 보위부 핵심실세였던 류경 부부장이 간첩죄로 처형되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류경 부부장과 주상성 부장의 숙청 및 해임은 일부 알려졌던 내용이지만 정부 소식통을 통해 각각 간첩죄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것이 확인된 것은 이례적
- 류경 부부장의 숙청에는 김정은 측근 인물들의 제보, 주상성의 해임에는 알력관계에 있던 고위 간부의 밀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보위부 소속 류경 부부장의 측근 간부들도 대거 해임된 것으로 보는데, 인민보안부 역시 지방 보안서에 이르기까지 중앙당의 대대적 감찰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한편으로 김정은 시대의 주축이 될 중간 간부층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당·정·군 중간 간부층을 30~40대로 교체하고 있고, 당 전문부서 과장급에도 40대를 기용하면서 지방당에도 60대 이상 간부들을 젊은 층으로 바꾸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체제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주민 소요에 대비해 지난해 각 도·시·군 별로 특별기동대를 창설한 것으로 전해짐.
- 또 잠재적 체제위협 세력 제거의 일환으로 평양시에서는 전과자나 지방출신 노동자를 오지로 보내고, 양강도 및 함경북도 등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국경으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탄광으로 추방하고 있다며 뉴스는 전함.

● **김정일,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6/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의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밝힘.
-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산과수농장은 인민들에 대한 과일 공급뿐만 아니라 나라의 과수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장이라고 하시면서 농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다"고 전함.
- 이어 "고산과수농장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능력확장공사를 계속 줄기차게 벌이며 과일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셨다"고 덧붙임.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비서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했으며,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수행단에 거명되지 않음.

● **北김정일, 대외건설자 예술소조공연 관람(6/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연관람에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수행했지만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음.
- 공연을 관람한 김 위원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피흘려 싸운 것도 우리 노동계급이었고 새 사회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것도 우리의 노동계급"이라며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새 문화창조에서도 마땅히 노동계급이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6.3 라오스 주식 '썸말리 싸이나썸' 생일 75돌 축전(6/3, 중통)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6/7,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5/31, 중통·중방)
- 김영남, 5.31 駐北 알제리 대사('하싼 라베히') 신임장 접수(5/31, 중통·중방)
- 김영일(黨 비서), 5.31 프랑스 조선연구그룹바 대표단과 담화(5/31, 중통·중방)
 - 北 黨중앙委, 5.31 김영일·리영철(黨 부부장) 등 참석下 프랑스 조선연구그룹바 대표단을 위한 연회 개최
- 김영남, 6.2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6/2, 중통)
-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일 黨비서, 6.2 新任 알제리·가나·베트남 대사와 담화(6/2, 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방문 및 "관계부문 일꾼협의회 조직" 등 현지 요해(6/3, 중통·중방)
- 김영남, 6.3 프랑스 조선연구그룹 대표단과 담화(6/3, 중통·평방)

나. 경제

● '5면3감'...北나선 투자 세제특혜에 신조어(5/30, 연합뉴스; 경제연구)

- '3면 2감' '4면 3감' '5면3감'북한이 나선경제자유무역지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각종 세제혜택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북한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근호(2011.2호)는 논문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세금특혜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라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집중적으로 소개
- 이 잡지는 작년 9월 공포된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규정규칙'을 인용해 "하부구조건설부문(SOC)에 우선적으로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줄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세율적용을 '5면 3감'으로 소개
- 이어 생산부문의 외국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소득세를



-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토록 했다며 이를 '3면 2감'으로 소개했으며, 3천만유로 이상 인프라 투자 때는 4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 감세토록 한 것을 '4면 3감'으로 설명
- 경제연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소득세는 14%로 중국 특구의 15%, 홍콩의 18%, 싱가포르의 26%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세금특혜는 기업소득세뿐만 아니라 영업세와 거래세의 세율설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
 - 이 잡지는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과세대상을 단지 비생산용 고정재산에만 국한시켰다"며 "주택용 건물인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 지대에 건물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그들이 직접 건설했거나 자기 자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때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함.
 - 경제연구는 "일관성 없이 법규정을 자주 뜯어고쳐서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들이 투자재산에 대한 법적 담보를 잃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투자욕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
 - 이어 "세무관리일꾼들이 외국인 투자관계법을 정통하고 회계, 재정, 금융, 가격, 세무 등 풍부한 경제지식을 소유하며 그것을 능숙히 활용하는 문제는 오늘의 중요한 요구"라며 세무관리들이 새로운 세무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 "EU 내달 6~17일 방북 식량조사"(5/31,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식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소속 직원 5명은 다음달 6일 방북, 17일까지 12일간 병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고 주민·당국자와 면담을 통해 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들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계획
 -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ECHO의 마코 카푸로 북한 담당관은 VOA에 "조사단이 활동을 마치면 바로 내부검토를 거쳐 2~3주 내에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자체 개발 컴퓨터 생산"(5/31, 중국통신망(通信網))
-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컴퓨터 '붉은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중국통신망(通信網) 등 중국 언론이 31일 보도
 - 언론은 북한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갖춘 3개 모델의 붉은별 컴퓨터 양산에 들어갔다고 전했으며, 북한이 생산 중인 컴퓨터는 2개의 교육용과 1개의 사무용 모델이라고 전함.
 - 북한 컴퓨터 생산 공장 배명석 대표는 "붉은별 컴퓨터는 오랜 연구 끝



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이라며 "생산 원가는 매우 낮지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모두 장착돼 있다"고 소개했으며, 그는 "컴퓨터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남의 우량 벼씨 보급해 북한 식량난 해결한다(5/31, 연합뉴스)**

- '통일밭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와 통일농업운동단체가 다시 손을 잡고 경남의 우량 벼씨를 북한에 보급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31일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회장 전강석)와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밀양에서 다수확 우량품종인 '삼덕벼' 등을 심어 77t을 수확해 북한에 보낼 계획
- 경남에서 주로 재배되는 우량 벼씨인 삼덕벼와, 은광벼, 만종벼 등을 제공하면 20% 가량 수확을 늘릴 수 있고 비료와 농약까지 제공한다면 40%까지 늘려 남한수준의 수확량에 접근할 수 있다고 경통협은 설명
- 북한이 현재 자체 생산하는 쌀은 250만t으로 수요에 비해 매년 100만t 가량 모자라는 형편인데 40% 증수가 실현된다면 식량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계산이라고 뉴스는 전함.
- 내년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3천858ha로 재배면적을 늘리고 2014년엔 북한 전역 1만5천432ha에서 재배해 7만8천700t을 생산한다는 것이 경통협의 계획

● **"北, 2009~2010년 伊서 사치품 수입 시도"(5/31, 아사히신문)**

- 북한이 2009~2010년에 이탈리아에서 영사기와 코냑 등 사치품을 수입하려고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유엔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5월 이탈리아에서 관객 1천명 규모의 영화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영사기와 앰프 등을 수입하려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
- 또 2009년 8월에도 코냑 150병과 위스키 270병 등을 수입하려다가 이탈리아 동부 해안도시 안코나 세관 당국에 압류됐고, 지난해 9월에는 미국제 탭댄스용 고급 신발 60켤레가 이탈리아 세관에 압류되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北총리, 생산현장서 협의회 열어(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최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안변청년발전소, 중앙양묘장 등을 시찰하고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중앙통신은 "총리는 해당 단위에서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기술개건을 다그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했다"고 밝힘.
- 이어 "협의회에서는 선진기술에 따른 압연 강제 생산공정의 주체회를 실현하고 효율 높은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문제, 나무모 생산의 공업화



와 당면한 모내기 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문제 등 여러 부문 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덧붙였다.

● **美 대북제재, '이란식 제재'로 확대 조짐(6/1,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란식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 상원에 지난주 제출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되었다고 뉴스는 보도
-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으로 우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와 북한과의 거래 둘 중 하나를 사실상 선택하라는 의미
- 이 밖에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와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는 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등도 포함
- 미 의회 소식통은 31일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제재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이 법안은 북한 뿐 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함께 묶어서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 또한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재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제재법안 내용이 하원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 **"北, 근로자 7만 명 외국 파견"(6/1, 도쿄신문)**

-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근로자 7만 명을 외국에 보내 일하게 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일 국내 단체인 '북한인권개선회'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
- 이 신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중동에 1만5천명, 아프리카와 중국·몽골에 각각 8천명, 동남아시아에 5천명, 동구권에 5천명을 파견하고 있다며 전체 파견 근로자는 5년 전의 약 두 배인 7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신문은 또 북한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천억 엔(약 1조3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중 상당액을 상납 등의 방식으로 뜯



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北 금강산특구법 제정...현대 독점권 제한(6/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북한에서 제정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는 한 달여 전인 4월 말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이 금강산 지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조선중앙통신은 2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
- 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여 외국의 투자에 관한 문구를 앞세움
- 또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 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천명

● **美 "대북식량지원 해도 쌀은 안줄 것"(6/2,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 시 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
-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킹 특사는 다만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로,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 이어 킹 특사는 "방북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 직책(북한인권특사)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해 이를 계기로 약 20분간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결론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김 부상은 인권문제 논의를 위해 나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전함.
 - 그는 "이번 방북은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첫 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와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한국은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의 식량지원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
 - 이밖에 그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미국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중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중국 측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
- **"北, 미국의 식량지원 조건 모두 수용"(6/2, 아사히신문)**
- 북한이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
 - 이 신문은 '6자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달 말에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났을 때 식량의 군 전용을 막는 감시 태세를 갖추라는 등 미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전함.
 - 한편 킹 특사는 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토 가능한 미국의 식량 지원 방식에 대해 ▲군부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식량을 지원하고 ▲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어 요원을 북한에 두고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지원하기보다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
- **황금평·라선특구 착공식 이달 열릴 듯(6/3, 연합뉴스)**
- 지난달 말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던 북한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단둥(丹東)과 연변(延邊)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합작하기로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각각 이달 7일과 9일 열릴 예정
 - 단둥의 소식통들은 "황금평 개발 착공식 준비가 완료됐다"며 "7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은 이보다 이틀 뒤인 오는 9일 훈춘-북한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과 함께 라선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변의 소식통들이 전함.



- 연변의 한 소식통은 "라선에서 연변에 파견된 북한 인사들이 오는 9일에 맞춰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에는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의 참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고 뉴스는 전함.
- 이들이 참석한다면 단순한 착공 행사뿐 아니라 이들 지역의 합작 개발을 위한 북·중 간 모종의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황금평의 경우 기간이나 방식 등을 명시한 임대 협정이, 라선특구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시멘트 등 특구 개발에 필요한 설비 지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5.3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총 6장 41조) 채택 정령 제1673호 발표(6/2, 중통·중방)

다. 사회·문화

● "흡연을 낮춰라"…北 목표는 30%(5/31,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흡연율을 30%까지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 북측 매체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흡연율은 54.7%로 북한에서는 여성이 담배를 거의 피울 수 없는 분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흡연을 하는 성인 남성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뉴스는 지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북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6%로 아시아권에서 57%였던 중국과 라오스 다음으로 높았다고 뉴스는 전함.
- 2000년 6월 조선중앙TV가 "모든 사람이 건강에 나쁜 담배를 끊고 건강한 몸으로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금연을 재촉한 것만 봐도 흡연율을 낮추려 애쓰는 당국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뉴스는 보도
- 실제 북한에서는 2005년 담배통제법을 제정한 데 이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담배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를 끊으려는 이들에게는 금연보조제를 나눠주며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은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흡연율을 30%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목표를 이뤘을 공산은 낮아 보이는데, 이는 실제 30%까지 흡연율이 낮아졌다면 당국이 나서서 '홍보'했을 테지만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에도 조선중앙방송이 "금연과 관련한 위생선전활동과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비롯해 여러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린 게 전부임.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자강도예술단의 5.30 ~ 31 동평양대극장에서 공연진행(5/31,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中 "한반도 안정, 南北노력 · 협조와 불가분"(5/3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31일 "한반도 안정 유지는 남북한의 공동 노력, 협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연합뉴스가 보도
-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30일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남북한 쌍방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 들어 관련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고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기를 희망 한다"고 언급
- 그러나 그는 북한 · 중국 정상회담 이후의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중 실무회담 개최 여부를 묻자 "구체적인 소식을 알게 되면 그때 알려 주겠다"며 대답을 피했다고 뉴스는 전함.

● 캠벨 "北, 남북대화 취해야 할 조치 있다"(5/3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 캠벨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 김정일 방중 결과에 따른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입장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중국이 북한에 분명히 하도록 공개적 · 비공개적으로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 재개 전 남북 간의 중요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강조
- 그는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일 방중 결과와 관련한 공식적인 디브리핑은 받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중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힘.
- 그는 또 미국과 동남아와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욱 더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올



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함.

- "北고려항공, 주 1회 쿠웨이트 취항"(6/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주 1회 정기운항 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5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최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수요일 새벽 1시10분에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시터의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의 비행 편을 운항하기 시작
 - 이 비행기는 같은 날 오후 2시 쿠웨이트를 떠나 다음날인 목요일 새벽 5시에 평양으로 돌아오는 일정
 - 쿠웨이트에는 약 3천5백 명의 북한근로자들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같은 소식은 고려항공의 비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 가장 먼저 알려졌고 이후 항공관련 인터넷사이트들이 같은 소식을 잇달아 전함.
 - VOA는 그러나 고려항공이나 쿠웨이트시터 국제공항 측에서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쿠웨이트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월 1회 운항하고 있으며 2주에 1번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 1회 운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함.

3. 대남정세

- 北 "南정부 상종 안 해, 심리전엔 물리적 대응"(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30일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軍)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며 이같이 밝힘.
 - 성명은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아량 있는 제안에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
 - 이어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성명은 또한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 "제 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 보라"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



- **"육사동문' 가장 北 해킹 메일 확산"(5/30, 연합뉴스)**
 - 육군사관학교 동문을 가장한 북한의 해킹 이메일이 일선 부대 장교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군 관계자는 30일 "육사 동기를 가장한 해킹 이메일이 확산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7일 일선 장교들에게 긴급 경고문을 하달했다"면서 "메일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북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 그는 "현재까지 60여명의 육사 출신 장교에게 해킹 이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군 내부망에서는 한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 당국은 "북한 해커에 의해 한메일(다음) 계정을 사용하는 현역 장교를 목표로 해킹 시도가 급속히 확산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 발신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해당 부대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팀(CERT)에 신고하라"고 당부

- **통일부, '대북지원 협의' 방북 4건 허용(5/31, 연합뉴스)**
 - 통일부가 지난 30일 인도적 대북지원 협의 목적의 방북신청 4건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에 따라 천태중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관계자 7명과 등대복지회 관계자 2명이 31일 각각 북한 개성을 방문해 대북 지원과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날 저녁 돌아올 예정이며, 이번 방북에서 1천300만원 상당의 분유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편 통일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15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논의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에 대해 30일 불허방침을 통보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 따라 사회문화 교류 등의 방북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인도적 목적의 방북은 허용 폭을 차츰 넓혀가려 한다"고 말했다.

- **'내일 금강산 관리인원 출·입경' 北에 통보(5/31, 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6월1일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인원 14명의 출·입경 계획을 31일 북측에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관계자는 "내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관리인원 7명이 귀환하고 7명이 방북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오늘 오전 서해(軍)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북측의 회신 여부에 따라 우리 측 인원 14명은 이르면 오전 9시40분부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입·경할 예정

- **"北 해커 3천명...전원 유학 등 각종 특혜"(6/1, 연합뉴스)**
 - 북한이 '정보전사(해커)' 양성을 위해 전국의 영재를 평양으로 불러 모아 해외유학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해커들이 속한 사이버부대의 규모를 기



- 존의 6배인 3천명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탈북지식인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의 김홍광 대표는 1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전국의 영재를 평양의 금성 1·2중학교 컴퓨터영재반에 해커로 양성한다"고 밝힘.
- 김 대표는 "이들 영재에게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면 지방에 있는 부모를 평양에서 살게 해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림대학 등에서 공부시킨 뒤 전원 외국유학을 보내는 특혜를 준다"고 전함.
- 김 대표는 "이들은 유학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해킹전문부대에 배치되며 이들 부대는 영재반 졸업생을 끊임없이 수혈 받아 평균 20대 연령층의 젊은 전투력을 유지 한다"고 설명
- 그는 또 "북한은 지난해 정찰총국 예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121국(사이버전 지도국)으로 승격시켰고 소속 병력도 기존 500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렸다"며 "북한은 사이버 전력 구축 및 유지비용이 기존의 육·해·공군력에 비해 적다는 것에 주목해 사이버전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
- 김 대표는 "북한은 사이버 공격 시 중국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꼭 집어 밝힐 수 없고 이로 인해 북한은 남남 갈등 조장의 효과까지 누린다"며 "북한으로서는 무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라고 느낄 것"이라고 강조
-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를 통해 이른바 '닷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키는 등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체제선전,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테러 및 간첩교신의 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례 등을 볼 때 향후에는 국가안보모방과 군사망을 무력화하는 사이버전을 감행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전망

● 北 "南, 판문점 등서 3차례 정상회담 제안"(6/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지난달 남한이 베이징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을 5월 하순 열자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밝힘.
- 북한은 특히 남북 간 비밀접촉에 나선 남측 인사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고 이명박 정부를 '역적패당' '불한당' 등으로 표현하며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고 밝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지난 5월9일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나와 북측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밝히면서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
- 국방위 대변인은 "이들은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



- 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말함.
- 이어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아주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괴뢰들은 비밀접촉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이남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꼭 비밀에 부쳐달라고 했다. 이러한 자들이 이명박 역도의 '베를린 제안'의 당위성을 선전할 목적 밑에 베이징 비밀접촉 정형을 날조해 먼저 여론에 공개했던 것"이라며 남측에 책임을 돌림.
- 또 "이명박 역적패당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 제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고 비공개 접촉 사실을 왜곡해 신의 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회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 대변인은 문답에서 "남측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

● 北 비밀접촉 '이례적' 공개..파장일 듯(6/1, 연합뉴스)

- 북한이 1일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9일 베이징에서 남북 비밀접촉을 가졌다고 남측 접촉 당사자인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비롯해 내용을 상세히 공개
- 북측은 이 접촉에서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북)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
- 또 "남측이 최소한 두 사건(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속하자.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 망신을 당했다"고 말함.
- 북측은 남측이 제안한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8월)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면서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주장
-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 후속조치로 장관급회담을 거쳐 내년 핵안보정상회의까지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구상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측이 남북 간의 비밀접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비밀접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천식 실장은 지난달 19일 베이징 비밀접촉설이 불거지자 "최근 베이징에 간 적이 없다"면서 베이징 접촉설을 전면 부인함.
- 정부는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진정성을 사실상 남북 간 대화재개 조건으로 북측에 요구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측의 주장대로 돈 봉투를 꺼냈다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역적패당·불한당'...北 거친 표현으로 南 비난(6/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상회담 비밀접촉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면서 '이명박 역도' '이명박 역적패당' '불한당'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
- 중앙통신은 "역도가 제아무리 발악해도 집권 3년간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압박용 언사를 이어감.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 한나라당을 '역적패당'이라고 지칭하며 남한의 대북정책을 북측에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을 줄이고 교류 통로를 좁히는 대북정책이 추진되자 점차 험한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를 높임.
-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나온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는 "리명박 역적패당과 더 이상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리명박 역적패당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못된 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는 등 공식 입장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표현도 많이 포함
- 특히 북한은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서는 '특대형 모략극'이라거나 '날조극'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남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북한의 거친 표현에는 남측을 압박해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은 먼저 대화 카드를 연속적으로 내밀던 올해 1~3월까지는 남한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대남압박을 하거나 '리명박' '정부' 등으로만 남측을 지칭

● 조선신보 "北 비밀접촉 폭로는 최후통첩"(6/1,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남북 비밀접촉 논의 내용을 공개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에 대해 '평양의 최후통첩'이라고 밝힘.
- 신문은 북한이 '정세의 긍정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남측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조선신보는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중수뇌회담(5월25일)에서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 견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추구'



- 등의 정책방향이 확인됐고 그 직후 평양에서 동족대결정권을 향한 최후 통첩이 나왔다"고 전함.
- 이어 "조선이 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음은 명백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대화외교 재개의 흐름을 거역한 정권을 신랄하게 단죄하는 성명을 일부러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 또 "보도에 의하면 조중수뇌회담에서 쌍방은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문제를 상정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앞으로의 정세추이가 실증할 것"이라고 밝혀 남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라는 주장을 내비침.
 - 신문은 "조선은 지난 4월 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북남대회와 관련한 최고영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최고수준에서 이뤄진 중대제의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대북대결정책을 완전 포기한다면 혹시나 구원의 손길이 뻗쳐올 수도 있겠다"고 여지를 둠.

● 정부, 北공개 '비밀접촉 내용'에 반박(6/1,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이 공개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공개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돈 봉투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면서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고 강력 부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
- 북측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9일부터 비밀접촉이 있었다면서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
-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측이 북측에 애걸, 구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며 뉴스는 전함.
-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요구했다"면서 "우리가 정상회담에 연연해서 입장을 수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8월)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반박
- 그는 "정부는 이번 접촉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천안함·연평도 문제, 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 있고, 풀리는 형식의 하나로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고 설명



- 이 당국자는 그러나 비밀접촉에 남북 양측에서 누가 나갔는지, 접촉 장소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고 뉴스는 전함.
 - 당국자는 남북 비밀접촉 이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3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오늘 국방위 대변인 답변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함.
- **北 "6·15선언 실천 남북최 개성서 공동행사"(6/1,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해외 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공동행사를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6월15일 개성에서 북측 100명, 남측 100명, 해외 측 60여명의 참가 하에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평화 통일민족대회를 개최기로 했다"며 "대회에서는 개막식과 토론회, 부문별 상봉, 예술공연, 개성지구 역사유적 참관, 폐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 **北 "상종 불가 국방위성명은 단호한 징벌"(6/2, 우리민족끼리)**
 - 1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북한이 2일에도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비난
 - 이날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관련해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은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에게 가해진 단호한 징벌이며 정정당당한 조치"라고 강변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며 "오늘 북남관계가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리명박 패당이 집권초기부터 악랄하게 감행해온 반공화국대결 책동의 필연적 후과(결과)"라고 주장
 - 이어 "리명박 패당은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운운하며 대화와 협력을 끈덕지게 거부했는가 하면 특대형 모략극까지 날조하고 반공화국 심리모략전과 전쟁도발 책동을 벌였다"며 "반공화국 대결책동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과 신성한 체제를 비난하고 헐뜯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비난
 - **北 "예비군 표적'은 특대형도발...군사적보복"(6/3,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3일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동적위군 부대들은 역적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공식담보해야 한다"며 "모든 부대는 괴뢰당국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 처형과 사죄조치를 세울 때까지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대응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남조선 괴뢰당국은 최악의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괴뢰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즉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 대변인은 "세계는 나라와 민족의 최고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대응이 어떤 것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비고 있는 이명박 역도와 괴뢰 군부호전광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군사적 대응을 다짐
- 또한 그는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고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최종결론"이라고 밝혀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도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표적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캠퐀 "北, 남북대화와 취해야할 조치 있다"(6/1)

- 커트 캠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캠퐀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 김정일 방중 결과에 따른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우리 입장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중국이 북한에 분명히 하도록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중국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 재개 전 남북 간의 중요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취해야할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일 방중 결과와 관련한 공식적인 디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중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동남아와의 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더욱 더 협력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올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시아 지역의 미군 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 <정부, 北공개 '비밀접촉 내용'에 반박>(6/1)

- 정부가 북한이 공개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에 대해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공개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돈 봉투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면서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북측은 이날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9일부터 비밀접촉이 있었다면서 남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했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시인 사



과와 재발방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요구했다"면서 "우리가 정상회담에 연연해서 입장을 수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8월)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음.

- 그는 "정부는 이번 접촉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천안함·연평도 문제로, 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그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 있고, 풀리는 형식의 하나로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비밀접촉에 남북 양측에서 누가 나갔는지, 접촉 장소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음.
- 북측은 "5월9일부터 비밀접촉 마당에 나온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라고 언급했음. 북측은 이번 비밀접촉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우리측의 책임 있는 태도 요구에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태도가 시인사과와 거리가 멀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음. 당국자는 남북 비밀접촉 이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3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오늘 국방위 대변인 답변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 이번 비공개접촉을 북측이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면서 "발표 형식이나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측했음.

● 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활동시한 다시 연장(6/3)

- 오는 12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DPRK Panel of Experts)이 앞으로 1년 더 활동하게 됨.
- 3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6월 순회의장국 가봉)는 오는 10일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시한 연장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음. 외교소식통은 "전문가 패널의 활동시한이 12일로 종료되지만 최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접수돼 활동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대북 전문가 패널은 2009년 6월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돼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여왔음. 패널의 활동시한은 1년간으로 지난해 6월1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안보리 결의에 따라 1년이 연장된 바 있음.
-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중순 대북 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우



라눔 농축 프로그램(UEP)을 '군사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안보리가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위성 촬영 사진을 공개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중국 측 위원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정식 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못했었음.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식량지원 결정 3~4주는 걸릴 것"(5/30)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3~4주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음. 워싱턴 소식통은 29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바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국은 킹 특사와 함께 방북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체 평가팀의 조사 결과는 물론 유럽연합(EU) 평가팀의 별도 방북 조사 결과까지 나온 뒤 이를 종합해 분석하고 WFP(세계식량프로그램)나 NGO(비정부기구) 조사결과 등과 비교해 검토하는 과정 등을 거쳐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 평가팀이 다음 달 초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지방을 순회하며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의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빨라야 다음 달 하순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 이 과정에서 한미 정부 간의 조율 과정 등을 감안하면 최종결론 도출 시기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소식통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3~4주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한편 미국은 식량지원을 결정할 경우 북한이 거부해 2008년 중단된 식량지원 당시보다 더 엄격한 모니터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 美 대북제재, '이란식 제재'로 확대 조짐(6/1)

-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란식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이란 제재 대상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음. 이런 이란식 제재 방안을 대북제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 미 상원에 지난주 제출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음.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임.
- 우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와 북한과의 거래 둘 중 하나를 사실상 선택하라는 의미임.

- 법안은 또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음.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수출 등 자금줄이 차단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최근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 등을 크게 늘리고 있음. 한마디로 북한의 최대 돈줄을 죄겠다는 의미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은 지난 2002년 5천만 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8억6천만 달러 규모로 17배 정도 늘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바 있음.
- 법안은 이 밖에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와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하고 있음. 또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는 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등도 포함됐음.
- 아울러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음. 대통령이 이들 금지 인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경우 최소한 7일 전에 의회에 알려줄 것도 요구했음. 또 이란, 북한, 시리아 등 3개국에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도 담고 있음.
- 이번 법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존 카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음. 미 의회 소식통은 31일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제재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이 법안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함께 묶어서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한편 하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 공동발의로 이란제재 강화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재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제재법안 내용이 하원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 美 "대북식량지원해도 쌀은 안줄 것"(6/3)

-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식량 지원시 지원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



- 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모니터링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요원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식량전용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음.
- 그는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자신의 최근 방북 결과 등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 및 공여국들과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떤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2009년 3월 식량지원을 돌연 거부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원들을 추방했을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 잔여분 2만t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킹 특사는 또 "최근 북한 방문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및 다른 외무성 고위 관계자들과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 대화를 했다"고 밝혀 북미간 인권대화가 이뤄졌음을 전했다. 그는 "이번은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첫 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밝혔다.
 - 그는 김 부상과 인권문제를 계속 논의기로 했음을 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북측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음. 이 밖에 그는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미국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지 말도록 중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중국 측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했음.
 - 아울러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을 위해 대북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뉴미디어 사용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김정일-장쩌민 양저우 회동 불발된 듯"(6/2)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0~26일 방중 때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북수의 정부 고위소식통은 2일 "김 위원장과 장 전주석이 만났는지 여부를 공식 확인할 길이 없으나 여러 가지 입수된 첩보들과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으로서 장 전주석을 만나지 못한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동에서 북·중 경협문제가 희망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측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서라고 설득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음.



- 소식통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중국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면서 "중국이 '선물'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성명과 대답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그만큼 북·중 협의가 순조롭지 못했으며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고 말했다.

● 황금평·라선특구 착공식 이달 열릴 듯(6/3)

- 지난달 말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던 북한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 3일 단둥(丹東)과 연변(延邊)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합작하기로 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각각 이달 7일과 9일 열릴 예정이다. 단둥의 소식통들은 "황금평 개발 착공식 준비가 완료됐다"며 "7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착공식에 참석할 북한 인사들이 투숙할 것으로 알려진 단둥의 크라운호텔은 오는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투숙객을 받지 않고 있음. 이 호텔은 애초 황금평 착공식이 예정됐던 지난달 27, 28일에도 예약을 받지 않았다가 착공식이 취소되면서 투숙객을 받았음.
-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은 이보다 이틀 뒤인 오는 9일 훈춘-북한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과 함께 라선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연변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연변의 한 소식통은 "라선에서 연변에 파견된 북한 인사들이 오는 9일에 맞춰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에는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의 참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 단둥과 연변 소식통들 모두 "장 부장과 천 부장이 참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이들이 참석한다면 단순한 착공 행사뿐 아니라 이들 지역의 합작 개발을 위한 북·중 간 모종의 협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음. 황금평의 경우 기간이나 방식 등을 명시한 임대 협정이, 라선특구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시멘트 등 특구 개발에 필요한 설비 지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中 "북에 모험 말라" 촉구(6/5)

- 중국은 북한에 어떤 모험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5일 밝혔다. 량광례 부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은 외부세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량 부장은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현재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관리들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공식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 기 타

● "EU 내달 6~17일 방북 식량조사"(5/31)

-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식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1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소속 직원 5명은 다음달 6일 방북, 17일까지 12일간 병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고 주민·당국자와 면담을 통해 북한의 식량안보상황을 점검함. 이들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과도 접촉할 계획임.
-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ECHO의 마코 카푸로 북한 담당관은 VOA에 "조사단이 활동을 마치면 바로 내부검토를 거쳐 2~3주 내에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軍 1955년 DMZ에 고엽제 항공살포"국내 첫 증언(5/30)

- 미군이 1950년대 중반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국내 첫 증언이 나왔음. 육군상사로 퇴역한 음도남(77. 연천군 신서면)씨는 "입대 이듬해인 1955년 육군 15사단 백마고지(강원도 철원군)에서 근무할 당시 미군이 헬리콥터 등 항공기로 한 달에 서너 차례 DMZ에 고엽제를 공중 살포했다"고 30일 밝혔음.
- 음씨는 당시 백마고지에서 한 달가량 근무하다 후방으로 근무지를 옮겼음. 그의 증언은 그동안 '1960년대 말 미군 주도하에 DMZ에 고엽제가 대량으로 뿌려졌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됨. 음씨는 당시 고엽제 살포는 미군이 독자적으로 했으며 한국군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음.
- 그는 "미군 비행기에서 뿌리는 약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 한국군은 방독면과 우의를 착용하고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했다"며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는 풀과 나무가 벌겁게 타들어갔다"고 기억했음.
- 당시 전방에는 지금 휴전선과 달리 철책과 경비 시설물이 없이 철조망 달린 울타리 2개가 전부로 교전이 빈번했고 '간첩이 넘어와 국군 목을 베어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적의 몸을 숨길 수 있는 풀과 나무를 없애는 일은 목숨이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음씨는 전했다.
- 고엽제 전문가 앨빈 영 박사가 2006년 작성한 '전술 제초제의 시험, 평가, 저장을 위한 국방부 계획의 역사와 미국 참전용사단체인 '용사를 돕



는 용사회(Vets Helping Vets)'가 연합뉴스에 공개한 미 정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고엽제를 연구했고 1952년 한국전쟁 배치를 염두하고 퍼플이라는 이름의 고엽제와 함께 공중살포장비를 개발했음. 또 비슷한 시기인 1956년 2~6월 푸에르토리코에서 제초제를 실험한 것으로 나타나 음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음.

- 이후 음씨는 연천군 신서면 천덕산 인근에서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1967년 두 번째로 고엽제를 접했음. 그는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 지휘 아래 고엽제 분말을 적어 침투로로 활용할 만한 곳에 맨손으로 떠서 뿌렸다고 했음. 그는 "잡초들이 별장계 타 들어가며 죽는 모습이 예전에 미군이 백마고지에서 약을 뿌린 뒤와 똑같았다"고 기억했음.
- 엘빈 영 박사 보고서에는 1960년대 말 DMZ에서 입자 형태 고엽제 '모뉴론' 7천800드림(39만7천800파운드)을 한국 군인들이 5m 간격으로 늘어서 기계나 손으로 살포했다고 기록돼 있음.
- 음씨는 20여 년 전부터 손가락 끝마디가 구부러지고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에 시달리다 지난 2007년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음.
- 국내 고엽제 피해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달리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에 참가한 군인이나 군무원을 일컫음.
- 현재 고혈압과 당뇨까지 앓고 있는 음씨는 "민통선 출입영농을 하면서 천덕산 인근에 가보면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풀이 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위험한 약품인 줄 알았다면 절대 맨손으로 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공동조사단, 내일 캠프캐럴 내부조사 착수(6/1)

- 한국과 미국은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의혹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2일부터 기지 내 조사를 벌이기로 했음. 또 기지 내 헬기장과 41구역, D구역 부근을 우선 조사한 뒤 고엽제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추가정보가 있으면 기지 내 다른 지역도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음.
- 양국은 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2차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음. 양국은 회의에서 공동조사단(영문명 Joint Investigation Team)의 모든 조사는 양국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음. 공동조사단은 지하투과레이더(GPR)와 전기비저항탐사법(ER)으로 250드림의 고엽제 매립 의혹을 규명하고, 지하수 샘플분석을 통해 고엽제 관련 물질을 조사하기로 했음. 특히 양국은 지하투과레이더 조사 이후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과 비투과 지역에 대해 토양 시추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음. 또 양국은 모든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검토한 이후 추가 조치사항 등의 필요성을 결정하기로 했음.
- 한국 측 대표단은 미국 측이 제공한 1992, 2004년 기지 환경 관련 보고



서에 대해 검토하고, SOFA 환경 분과위 협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했음. 또 향후 제기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 분과위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음.

- 육동환 차장은 "시료는 미국 측이 아웃소싱한 업체가 채취한 뒤 한미 양측이 나눠서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 본토에 분석을 맡기게 될 것"이라며 "추후 결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검증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6/3)

-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음. 이는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중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철회한 데 따른 것임.
- 정부는 기존에 상임위를 통과했던 비준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예정임.
- 김 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양국 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며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안보적 이익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음.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음.
-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협력이 예상됨.
-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정본 한글본의 번역 오류 재검독 결과, 200개 이상의 번역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후 이를 발표할 계획임.

● 캠벨 美 동아태차관보 10일 방한(6/4)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음. 캠벨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6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 몽골, 인도네시아를 순차 방문함.
- 그는 방한시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지역·범세계적 이슈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음.
- 특히 캠벨 차관보는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 일방공개와 남북대



화 거부에 따른 한반도 정세구도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조율할 방침임. 또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 방법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외교가 "성김, 한미관계 발전에 긍정적 카드">(6/4)

- 외교가는 4일 차기 주한 미국대사에 성 김 6자회담 특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한미관계와 동맹의 발전에 긍정적인 카드"라고 평가하고 있음.
- 외교소식통들은 우선 성 김 특사가 1882년 양국 수교 12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라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음. 한 외교소식통은 "이민 1.5세대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주한 미국대사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면서 "새롭게 격상된 한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의 한국계 기용 결정은 성 김 특사가 한미 간 가교역할을 하는데 적임이고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호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또 성 김 특사가 현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가장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임.
- 특히 성 김 특사가 주한 미국대사에 임명될 경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 현안대응에 있어 한미공조가 가일층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 특사에 임명된 이후 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직접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에서 한미공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더욱 '찰떡궁합'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외교가는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주한 미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군사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과 동맹 재조정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어려운 현안들을 매끄럽게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외교소식통들은 대체로 성 김 특사가 주한 미국대사에 걸맞은 중량감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성 김 특사는 이미 2008년 9월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쳐 '대사 타이틀'을 획득한 첫 한국계 미국인인데다 북핵과 한반도 업무를 전담하면서 백악관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 이런 가운데 북핵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6자회담을 전담할 특사에 클리퍼드 하트(Clifford Hart) 해군참모총장 외교정책 자문역을 지명하는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하트 자문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보좌관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서 한반도에 관한 경험이 별로 없는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게 아니어서 6자회담 업무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차세대 항공통신망 운영 개시(5/31)

- 국토해양부는 31일 차세대 항공통신망(ATN) 인프라 구축을 끝내고 6월부터 중국과 접속해 항공전문 소통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인접국을 상호 연결해 세계적인 항공전용 통신망을 구성하도록 규정했으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서로 통신망을 연결해 전 세계와 항공전문을 소통하게 됨. 현재 준비 중인 일본과는 2013년 접속하게 됨.
- 지금까지는 문자만을 이용한 항공고정통신망(AFTN)으로 비행계획과 항공기상, 각종 항공안전 관련 전문을 전 세계의 각 공항과 관제소, 항공사 등에 전달해왔음. 앞으로는 기관과 업체 간은 물론 항공기와도 통신이 가능하고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 대용량 정보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 국토부는 ATN이 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음.

다. 한·일 관계

● <日후생노동성 장관에 "정신대 해결" 촉구 서신>(5/30)

- 광주지역 시민모임 대표와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대신)에게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해 눈길을 끌었음.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표 김희용 목사와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는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7년 전인 1944년 오늘 전남 목포와 나주, 순천, 여수 등에서 138명의 조선인 여학생이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끌려간 것을 기억하며 호소카와 리쓰오(細川律夫)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신을 공개했음.
- 김희용 목사는 편지에서 "일본이 1945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65년이 지난 2009년에 몰가상승분을 가산하지 않고 99엔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99엔은 피해자에 대한 존엄 파괴와 일본의 악독성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음. 김 목사는 "일본이 지구촌에서 '영혼 없는 배부른 돼지 국가'로 명명되기를 원하느냐"며 "한국민들은 99엔 문제의 올바른 해결 없이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다면 지구촌 양심세력과 연대해 평화의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양금덕 할머니도 서신을 통해 "내 나이 14살 때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여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비행기 공장으로 끌려가 한국에 돌아왔지만 남편은 나를 위안부라며 끝내 외면했다"며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만 해도 배 한 척은 띄우고도 남는다"며 지난날의 고통을 털어냈음. 양 할머니는 "세상에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부려먹고 돈을 주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난 걸 보고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느냐며 누구보다 먼저 일본을 돕자고 나섰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2009년 12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에 대해 1인당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 국내에서 반발이 확산됐으며, 이후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부하고 재심사를 청구했음.

● 日 다자이후시 대표단 부여군 방문(5/30)

- 충남 부여군은 히라시마 테츠노부 부시장 등 일본 다자이후시(太宰府市) 대표단 7명이 부여군을 방문,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30일 밝혔다.
- 군에 따르면 양 도시 대표는 현재 민간교류 차원에 머무는 교류관계를 자매결연 단계까지 확대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음. 또 이 자리에서 일본 측 민간교류단체인 '소년의 배' 관계자들은 부여군의 교류단체인 '백제 청소년의 별'의 다자이후시 초청을 건의했음.

● 외교부 "日지진 한국인 사망자 추가확인"(5/31)

- 외교통상부는 31일 일본 동북지역 지진 및 해일사태로 한국인 임모(78.여)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전날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에 임씨의 사망사실을 통보해왔으며 임씨는 특별영주권자로서 미야기현 히가시마쓰시마(東松島)시에서 거주해왔음. 이에 따라 일본 지진으로 사망이 확인된 우리 국민은 모두 7명이고 조선적 재일동포 사망자는 5명임.

● "美지명위원회 사이트에 '독도' 명칭 사라져"(6/1)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가 유지 교수는 1일 "미국 연방정부 기관 지명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독도의 명칭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 대표 명칭이 됐고, 우리 측의 '독도(Dokdo, Tokdo)'는 현재 없어졌다"고 밝혔음.
-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가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독도지킴이'가 마련한 '독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소개했음. 그는 그러나 "일본 측 '다케시마(Takeshima)' 명칭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Dogdo' 등 일본인이 사이트에서 사용한 적 있는 욱 같은 명칭도 포함돼 있다"며 "다시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음. 호사가 교수는 "아무리 100년 이상 실효지배를 하더라도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100년, 200년 지나도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확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의 저자인 정재민 판사는 "지금은 조용한 외교냐 시끄러운 외교냐보다 법률적으로 유리하냐 아니냐에 집중해야 할 때



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제 판결문 뿐 아니라 일본 논문도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의 이 훈 독도연구소장은 "18-19세기에 어떤 지역의 어민들이 왜 울릉도에 갔으며 개척령 이후 어민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독도지킴이'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8월 초 독도에서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며, 장기적으로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한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임.

● <"안전해요"..한국 공관, 히로시마 관광 홍보>(6/3)

-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히로시마(廣島)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이 지역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음.
- 주(駐)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은 2일 오전 10시께 히로시마현과 인근 시마네(島根)현, 야마구치(山口)현을 포괄하는 주고쿠(中國) 지방 운수국과 연대 협력각서를 서명, 교환했음. 각서의 주된 내용은 '주고쿠 운수국은 관광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한국 총영사관은 히로시마 관광을 한국에 홍보한다'는 것임.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jpn-hiroshima.mofat.go.kr>)에 관광 안전 정보를 싣고, 지역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주고쿠 운수국은 한국인 유학생 등을 초청할 계획임.
- 한국 총영사관이 지역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웃 국가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생각에서임. 하지만 이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면 한국 공무원들이 나설 리 없음. 총영사관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후쿠시마 원전의 거리는 850km에 이룸. 서울-부산 간 직선거리(약 330km)의 두 배를 넘고,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 동해안간의 최단거리(약 1천km)와 큰 차이가 없음. 야마구치현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 후쿠시마보다는 부산과 훨씬 가까움.
- 신 총영사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우리의 인정 아닌가요"라며 "저렴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기면서 과거 조선통신사처럼 한일 양국을 이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의원, 대지진 피해현장 방문(6/3)

- 국회 아시아 문화·경제포럼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4~6일 2박3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한·일 양국의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관리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방일에는 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춘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등이 참가함. 국회의원단의 공식 방일은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임. 특히 의원방문



단은 후쿠시마(福島) 아즈마 이재민 피난소와 센다이(仙臺)시를 찾아 대지진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재민을 위로할 계획임.

- 이어 이들은 도쿄(東京)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예방, 일본 대지진 피해 및 희생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위로를 전하고, 지난달 한·중·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원자력 안전 및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이들은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의원을 비롯한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한·일 의원교류 활성화, 양국관계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함.
- 박진 의원을 비롯한 방문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귀국 후 정부에 국회 차원의 건의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라. 미·중 관계

● 게이츠 美국방 "中과의 군사관계 양호"(6/2)

-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아시아 순방에 나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미·중 양국의 군사관계가 현재 매우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음.
- 게이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로 가는 미군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7년 취임 이후 첫 방중 당시를 언급하면서 "재임 기간 양국의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포부를 펼쳤고 그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난관에 부딪힌 적도 있지만 양국 군사관계는 현재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음.
- 그는 "양국이 우려하는 바와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려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점이 바로 양국 간 전략대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그는 "우리는 중국을 제압(hold down)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중국은 수천 년 간 강대국이었으며, 현재 및 미래의 강대국이기도 하다고 치켜세웠음.
- 게이츠 장관은 최근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중 안보협력에서 진전의 징후들에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 고무돼 있다고 소개했음. 게이츠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그는 "중국은 소련의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모든 국방력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작전수행을 할 수 있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그는 대만 이슈는 양국 국방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빠지지 않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고 털어놓았



음. 이로 인해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모두 대만의 국방력 문제와 중국의 민감해 하는 입장 등을 고려해 얽힌 실타래를 신중하게 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 게이츠 장관은 미국 상원 의원들이 나서 F-16 전투기를 대만에 추가로 판매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음. 지난해 초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군사교류는 사실상 중단됐음.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과 전략경제대화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갈등 해결을 시도, 현재 양국 군사관계는 정상궤도로 복원됐음.
- 게이츠 장관은 2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인 상그릴라대회에 참석,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국방장관들과 회동할 예정임.

● 구글 "지메일 해킹 적발...진원지는 中의심"(6/2)

-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이 한·미 정부 관리와 중국 인권운동가 등의 지메일(Gmail, 구글 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킹의 진원지는 중국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1일(현지시각) 밝혔음. 특히 아시아 국가 관리들의 피해 계정 가운데는 한국 관료들의 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은 최근 중국 중부 산둥(山東)성 지난(濟南) 지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있었으며, 해커들이 지메일 계정 수백 개에 침입해 메일을 모니터하려다 적발됐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음.
- 구글은 해커들이 피싱 기법으로 비밀번호를 수집해 메일 계정에 접속한 뒤 메일 전달(포워딩) 기능 설정을 몰래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지메일 계정에서는 전달 기능 설정을 통해 수신 메일을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발송할 수 있음.
- 해킹 피해를 본 메일 사용자 가운데는 미국 정부 고위 관료, 중국 인권운동가와 언론인, 군 관계자, 아시아 국가 관리들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아시아 관료의 대부분은 한국 공무원들이라고 구글은 전했다. 구글은 그러나 자사가 해킹 사실을 감지하고 이를 저지했으며, 메일 사용자들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토미 비에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미 정부의 관용 이메일(official U.S. Government email accounts)이 해킹당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제니 셰어러 대변인은 사건 조사를 위해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음.

● 캠프 내주 방중..김정일 방중 후 정세협의(6/3)

- 커트 캠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주 초 중



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캠퐀 차관보의 방중은 미·중간 새 협업체 구상과 관련된 것이지만 북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 직후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도 깊숙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들었으나 캠퐀 차관보의 방중을 통해 좀 더 자세한 김정일 방중 결과를 듣고 후속 대책을 관련국들과 협의할 것으로 관측됨.

● 中 군사과학원 "美, '인터넷 전쟁' 초래"(6/3)

- 구글의 지메일 해킹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군사과학원 관계자들은 3일 미국이 아랍국가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인터넷 전쟁'을 개시했다고 비난했음.
- 중국 군사과학원 소속의 두 연구원인 예정과 자오바오셴은 이날 중국청년보에서 구글의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랍국가 체제 변혁을 조장하려는 최근의 컴퓨터 공격과 사건들은 미국 정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음. 이들은 "최근 인터넷 폭풍이 세계를 휩쓸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있다"며 "이 인터넷 전쟁의 전초전에 모든 국가와 군은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이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들은 또 중국이 "인터넷 국경과 인터넷 주권을 지키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 세계에 표명하고 인터넷 세계를 건전하고 질서정연한 환경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日, 美와 공동개발 미사일 3국 수출 용인(6/4)

- 일본 정부가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블록 2A)의 제3국 수출을 용인하기로 했음. 4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3일 도쿄에서 열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의 제3국 이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다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제3국이 다른 국가로의 미사일 이전을 막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의 전제 조건을 달기로 했음. 일본은 다음달 21일 예정된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 회의(2+2)에서 이에 공식 합의할 방침임.
-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은 미사일방어체계(BMD) 용의 미사일로 2014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며, 미국은 이를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토록하기 위해 유럽에 수출할 예정임. 일본은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들어 공동개발 미사일의 3국 이전에 신중한 자세였으나,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해 예외를 두기로 입장을 굳혔음.



바. 중·일 관계

● 中·日, 연내 방위교류 재개 합의(6/5)

- 중국과 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충돌 이후 중단한 방위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음.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인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4일 회견을 하고 방위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음.
- 량 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타자와 방위상이 올해 편리한 시기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음. 량 부장은 "중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며 "일본과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면서 민감한 문제들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음.
- 량 부장은 특히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신뢰감을 높여나가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발전이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에 기타자와 방위상은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 국가로 양국의 전략적 호혜협력관계는 양국 국민뿐 아니라 지역에도 유리한 작용을 한다"며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에서 끊임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화답했음.
- 한편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량 부장과 기타자와 방위상은 빠르면 이달 말에 차관급 방위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데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음. 량 국방부장은 회답에서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전에 일본 측 대표단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왔다"고 말했고, 기타자와 방위상도 "방위 교류를 안정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음.

사. 중·러 관계

● 시진핑 "2010년대 中·러 발전기회 맞을 것"(6/3)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2010년대에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시 부주석은 2일 로마에서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 행사에 참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음.
- 시 부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10년 전에 우호협력관계 조약을 맺은 이후 정치적인 상호 신뢰와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양국민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시 부주석은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 파트너로서도 서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실용적인 협력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과거 10년간 양국이 인적교류는 물론 정치, 경제, 에너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면서 "양국



이 특히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 G20(주요 20개국)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화답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